

보수단체, '거리두기' 완화되자 도심 집회신고 1000명 규모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 지역 등 집회신고 “행정명령으로 집회금지하는 건 독재행위야” “시진핑·김정은·문재인 대통령만 집회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보수단체가 오는 18일과 25일 1000명 규모의 도심집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10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

하고 있어 경찰은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과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북측 지역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집회는 1000명 규모로 예배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 참가할 단체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이다. 최 사무총장은 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이 집회는 행정금지조치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초법적 행정행위로 독재행위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계속 막는다면 이견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선 감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집회를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집회금지 처분이 나올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이번 집회는 예배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지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집회를 전면 허용하기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도 집회 금지 기준 조정 관련,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적극 허용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집회 자유라는 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세월호 유족 저서’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알려진 내용”

“특조위 조사 실질적 방해받았다고 인정 어려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 진실서비스 출범을 알리고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유족이 집필한 참

사 관련 저서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 특조위(재판장 '대한민국')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특조위는 박씨가 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과 관련해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밀 또는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적에 인용됐으며,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등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

중 문제되는 특정 부분 삭제 아닌 전면적 출판, 배포금지를 구하고 있다”면서 “인용된 자료들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이나 공판 등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들”이라고 봤다. 또 “일부 미공개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특조위 내부 공개자료일 순 있으나 감추고 보호할 필요성, 상당성을 갖춘 자료임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실명 기재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신상의 비공개 필요성 여부는 분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출판으로 인해 특조위 조사 활동이 실질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유나기자



상은 노출사고 독감 예방접종 재개

정부가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직접사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지법 공탁금 국고 귀속 전국 최다, 재산권 보호 소홀”

국고 귀속 건수 3년새 84.2% 늘어...대책 시급

광주지법이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전국의 공탁금의 국고 귀속 건수가 15.7% 감소했지만, 광주지법만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가 역주행

중”이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광주지법의 공탁금 국고 귀속 건수는 2018년 1447건(전국 4위), 2019년 2318건(전국 2위), 올해 8월 기준 2666건(전국 1위)으로 3년새 84.2%나 늘었다. 신 의원은 “광주지법만 역주행 중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 “광주지법의 공탁금 감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며 “월인 분석과 응당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정승호기자

“멀쩡히 골프 친 전두환 왜 불출석 허가했나”

불출석 사유, 건강 문제는 거짓...국감서 광주법원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선고를 앞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과 관련, 전씨 불출석 허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재판 불출석 사유인 전씨의 건강 문제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변론 종결 때까지 전씨에게 넘치는 배려를 해줬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국회에서 광주고등·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광주지법원장을 향해 “법정형이 경미해도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전두환)의 태도, 국민 법 감정을 볼 때 전두환 불출석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감게 경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조문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독사건이지만, 이 재판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다른 어떤 재판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전까지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행보를 비판하며 “불출석 재판 불허 또는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의 정의는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11월 30일 열린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